노조파업과 사회적 비용의 함수

한국에서 『2002년 여름은 월드컵 열기가 뒤덮었다면 2003년에는 노조파업이 뒤업고 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일반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월드컵 열기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한국이 불과 1년 만에 파업공화국 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5일 근무제 협상결렬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화물연대 역시 운송기업들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 뿐인가? 가을에는 노무현 정부의 노사관계 틀 조정작업이 예고되고 있어 노동계 파업이 춘투(春鬪), 하투(夏鬪)에 이어 추투(秋鬪), 동투(冬鬪)로 이어지는 4계절 투쟁 가능성까지 예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평균연봉 4000만-6000만원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더 높은 싱가폴, 타이완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고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으로 한국의 3배를 넘고 있는 일본과 비슷함은 물론, 하청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임금의 2-3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투쟁일변도의 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파업이 직업이 되어버린 노동귀족들도 문제이지만, 혹시 소속기업들이 연봉이나 복지수준을 더 높여도 회사경영에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 조사에서 국내기업들은 경영애로사항 중 가장 큰 것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꼽았고, 전통적인 애로사항이었던 내수부진, 원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지적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2003년 8월 현대자동차가 임금인상 및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이면서 순이익이 2조원을 넘는 판에 수백억원쯤 더 지출한다고 큰 일 날 것도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나, 국내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부풀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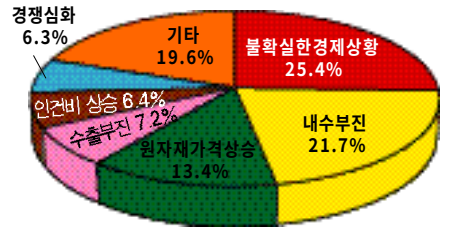
그렇다면, 현대자동차가 연간 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 자동차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경영이 안돼 쩔쩔매는 판에 현대자동차는 무슨 수로 2조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요, 또 다른 요인을 찾아본다면 자동차 자체의 문제점과 사회적 기여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산 자동차의 품질에 숱한 문제가 있고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장애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남은 물론 문제가 발견되어도 리콜을 거부하고 수리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수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에서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경유자동차 배출기준을 완화해주는 실정이다. 자동차기업들이 손쉽게 돈을 벌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극히 형편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이나 유럽기업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사회 일반의 발전을 위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상식이나 국내기업들은 TV나 신문에 큼지막하게 이름이 나오는 때에나 수억원을 기부하면서 생색을 낼 뿐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의 이익만 챙길 뿐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들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적대적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이다.

국내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2003.4)

결론적으로 국내기업들이 회사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담하거나 떠 안아야 할 책임을 기만한 채 스스로의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천민자본주의 사고방식이 노조에게 전파돼 나 홀로 많이 받고 잘 살고 보자는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내 화학산업계가 화학제품 가격동향이 어떻고 어느 화학기

업의 수익이 호전되고 있다든가 적자로 전락했다는 뉴스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환경문제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것도 한 단편이다.

국내기업들이 눈 가리고 아옹하는 날림 생산을 지양하고 사회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노사대결도 해결하는 의식전환을 이루기를 촉구한다.

<화학저널 2003/8/25>